

2019 국가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9.04.06 시행)

0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답] ② 반대이다.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 비해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책임감있는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 정책네트워크의 종류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이익집단+의회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행위자 간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영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 2019 9급 선행정학 p.205

0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답]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의 정원(「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 2019 9급 선행정학 p.398

03.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답]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최근 수업 때 강조한 내용).

● 주민청구 제외대상

주민감사청구 제외대상	① 수사 및 재판에의 관여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 ③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
주민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① 법령 위반 사항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부과·징수 또는 감면 ③ 행정기구 설치·변경 ④ 공공시설 설치 반대

☞ 2019 9급 선행정학 p.805

04.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 ① 지시적 위임형
- ② 협상형
- ③ 재량적 실험가형
- ④ 관료적 기업가형

[답] ④ 제시문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한다.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하고 정책집행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 ① [X] 지시적 위임형에서도 협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이 아니라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자들 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 ② [X] 협상형에서도 협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한 의견일치가 안될 때 벌이는 협상이다.

●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유형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집행실패이유	정책평가 기준
고전적 기술자형	구체적인 목표 설정	기술적 권한 소유	기술적 결함	효과성
지시적 위임가형		행정적 권한 소유	+ 협상 실패	효과성, 능률성
협상자형	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 왜곡, 부집행	주민만족도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인 목표 지지	목표수단의 구체화	+ 책임전가, 사기	수익자 대응성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 지지	(추상적)목표 설정	+ 사전오염 (입도선매)	체제유지도

☞ 2019 9급 선행정학 p.267

05.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답] ② 2016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공포된 「공무원 헌장」에는 공무원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명시된 가치로는 창의성, 다양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공정성 등이다(암기법:창다투전공공).

●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①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③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④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 ☑ ① [X]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는 공익추구라는 가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X] 반대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부산물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X]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에 해당한다.

☞ 2019 9급 선행정학 p.551

06.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행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한국철도공사
- ② 한국소비자원
- ③ 국립중앙극장
- ④ 한국연구재단

[답] ③ 국립중앙극장만 정부부처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이므로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된다.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기업으로 본다.

- ☑ ① [X] 공공기관 중 준시장형 공기업
- ② [X]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④ [X] 공공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2019 9급 선행정학 p.402

07. 엘리스(Allison)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 ② 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③ 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 ④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답] ③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Ⅲ)은 조직을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상정하며 따라서 이들 목표 간에는 일관성이나 공유감, 응집력이 없다.

- ☑ ① [X]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인정한다.
- ② [X] 조직과정모형(모형Ⅱ)은 회사모형과 전제조건이 유사하며 따라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한다.
- ④ [X] 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한다. 조직행태모형이라고도 불리는 조직과정모형(모형Ⅱ)은 조직행위자는 하나의 동일체로써 국가나 정부가 아니며 느슨하게 연결된 여러 하부조직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문제 또한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조직으로 분산되어 배정된다고 본다. 예컨대 미국 국무부는 외교, 국방부는 안보, 재무부는 경제문제 등으로 문제를 분해하여 관리된다고 설명한다.

●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합리모형 (모형Ⅰ)	조직모형 (모형Ⅱ)	관료정치모형 (모형Ⅲ)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 된 유기체적 조직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인 개개인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최고지도자가 권력 보유(집권)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분산 소유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목표의 공유감	매우 높다	중간	매우 낮다
구성원 응집성	최고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동시적 분석적 해결)	SOP에 의한 대안 추출(순차적 해결)	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타협, 협상, 연합, 흥정 (정치적 해결)
일관성	매우 강하다	약하다	매우 약하다
적용	전체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전제	합리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 2019 9급 선행정학 p.251

08.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답] ④ ㄱ만 틀리다.

- ☑ ㄱ [X] 반대이다. 포지티브(positive) 규제보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식의 규제이기 때문이다.

● 규제방식의 다양한 구분

구분	종류		개념	피 규제 자의 자율성
규 제 방 식	포지티브		원칙금지, 예외허용	낮음
	네거티브		원칙허용, 예외금지	높음
규 제 주 체	직접규제		정부(규제주체)가 기업(객체)을 직접 규제	낮음
	간 접 규제	공동	민간단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규제	높음
		자율	규제대상자가 규제주체가 되어 스스로 규제	
규 제 대 상	수단규제		투입(기술이나 수단, 행위)을 사전 규제	낮음
	관리규제		작업 또는 관리과정을 규제	중간
	성과규제		목표달성수준만을 정하고 이를 사후에 규제	높음
규 제 시 기	사전규제		행위이전을 규제(수단규제)	낮음
	사후규제		행위이후를 규제(성과규제)	높음

☞ 2019 9급 선행정학 p.51

0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답]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수업 때 위원장이 2인인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는 점 강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재평가(총리)
지방자치단체평가	자체평가, 필요시 평가 지원(행안부장관)

특정평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정책 평가(총리)
공공기관 평가	외부평가(자체평가 불인정)

☞ 2019 9급 선행정학 p.290

10.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답] 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1949년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다가 1952년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 ☑ ② [X]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을 지방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박정희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까지는 지방선거가 없었지만 1991.6 노태우 정부에 의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 ③ [X]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가 아닌 김영삼 정부(1995)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④ [X]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일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정당공천이 실시되고 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사

제1공화국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 정국불안과 한국전쟁으로 1952년에서야 지방의회 구성, 의원민선, 자치단체의 장은 간선 또는 임명
제2공화국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주민자치형의 법적 근거 마련 의원 및 자치단체장 민선, 임기 4년, 기관통합형에 의한 단체장 불신임 결의 및 의회 해산권 인정
제3공화국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 지방의회 해산, 단체장은 국가가 임명
제4공화국 (유신헌법)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헌법부칙에 규정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지방의회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리라고 헌법부칙에 규정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헌법 부칙을 폐지하고 의회구성시한을 지방자치법에 1991.6까지 지방의회구성, 1992.6까지 단체장 선출토록 규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
김영삼 정부	공직선거법 제정(1994)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1995)
김대중 정부	2대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출(1998)
노무현 정부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일을 임기만료 30일 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고(2004), 지방분권특별법 제정(2004) ⇨ 대대적인 지방분권 정책방향 및 로드맵 제시

☞ 2019 9급 선행정학 p.744

1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① 합리적·경제적 인간관
- ② 사회적 인간관
-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
- ④ 복잡한 인간관

[답] ① 제시문은 E.Schein이 주장한 합리적 경제인관에 해당한다. 합리적 경제인관에 따르면 인간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통제와 억압 내지는 경제적인 보상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암기법:합사자복).

● E.Schein의 인간관(역사적 인간관)

합리적·경제인관	고전적 조직론의 관점으로 인간을 합리적·이성적·경제적 존재로 간주
사회적 인간관	인간관계론(신고전이론)의 관점으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
자아실현적 인간관 (성장이론)	인간은 자기의 자질과 능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 행태과학에서의 Argyris의 성숙인, Maslow의 자아실현인 등
복잡한 인간관	현실적인 인간은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체계와 고도의 변이성을 지닌 복합적인 존재이므로 구성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리전략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상황적응적 관리 중시, 현대인은 복잡인이며 개인마다 복잡성의 정도도 때와 장소, 직무 등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

☞ 2019 9급 선행정학 p.324

12.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평정법
- ② 목표관리제 평정법
- ③ 중요사건기록법
- ④ 강제배분법

[답] ④ 집중화(중간점수로 몰리는 현상), 관대화(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현상) 등을 방지하려면 등급 분포 비율을 강제로 할당하는 강제배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평정상 착오

오류	개념	방지방안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강제선택법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 오류	목표관리법 중요사건기록법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강제배분법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강제배분법
규칙적 오차	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 (불규칙)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 관념에 의한 오차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 2019 9급 선행정학 p.506

13.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답]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용자나 세대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준다(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최근 수업 때 자주 강조한 내용).

● 조세와 공채(차입)

	조세	공채
부담	현세대(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분담)되지 않음)	세대간 부담(이용자·세대간에 비용부담 전가(분담))
관리	간편, 비용 절감	복잡(이자상환 등)
효과	경기회복 효과 작음	경기회복 효과 큼
저항	큼	작음
낭비	O(무임승차)	X(수익자부담)

● 차입(공채)에 대한 조세의 장단점

장점	① 이자부담이 없으며 부채관리와 자원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차입보다 비용이 저렴 ②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지출에 직접적인 책임 요구 가능 ③ 현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음
단점	① 세대간 비용·편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② 자유재라는 인식으로 과다수요 혹은 과다지출되는 비효율성 발생 ③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자원 동원의 시의성 결여 ④ 과세대상과 세율 결정 등 법적절차의 복잡성·경직성 ⑤ 차입에 비하여 경기회복 효과 기대 곤란

☞ 2019 9급 선행정학 p.632

14. 정부의 의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 ②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답]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이다.

● 위원회의 종류

소속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대통령	자치분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처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독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9 9급 선행정학 p.391

15.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 ② 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④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답] ④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해야 옳다. 즉, 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 리더십 이론의 변천

특성론(자질론)	리더의 자질, 속성 규명
행태론	리더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 규명(리더행동유형론)
상황론	리더십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조건 규명(3차원이론도 이에 포함)
신속성론	변혁적 리더십 등 리더의 속성(카리스마) 중시

● 변혁적 리더십

- ①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도덕적 수범, 신뢰, 존경, 리더와의 헌신과 일체감
- ② 영감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공유
- ③ 지적 자극 - 관행타파 및 새로운 관념 촉발
- ④ 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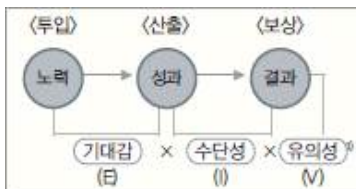
2019 9급 선행정학 p.344

16.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 ② 엘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앴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답] ④ 수단성이 아니라 유의성이라고 해야 옳다. 즉,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유의성(valence)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 V.Vroom의 동기기대이론(VIE이론)



- ① 기대감(E) -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 ② 수단성(I) - 성과(1차 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 산출·결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 ③ 유의성(V) - 보상(2차 산출이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2019 9급 선행정학 p.327

17.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② 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 ③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답] ② 시간선택제 근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하며 필요 시 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이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길게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 ☑ ③ [O] 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무일수를 조절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압축(집약)근무에 해당하지만 압축근무도 넓게보면 탄력근무제에 해

당한다.

● 유연근무제(1)

원격 근무제	택배근무형	가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업무처리 및 결재
	스마트워크형	주거지 근처 원격근무사무실(smart office)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사무처리
탄력근무제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필수근무시간대(10:00~16:00)를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압축근무제		주 40시간 근무를 주 3~4일로 압축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시간선택근무제(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주 15~35시간 근무하고 근무시간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정규직 공무원

● 유연근무제(2)

근무형태·시간·장소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인사혁신처)

유형	내용
시간선택근무제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주15시간~30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자율 조정
	근무시간 선택형
	1일 근무시간(4~12시간)을 조정하되, 주5일 근무 유지(주40시간 근무)
원격근무제	집약근무형
	1일 근무시간(10~12시간)을 조정하여, 주3.5일~4일 근무(주40시간 근무)
원격근무제	재량근무형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원격근무제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원격근무제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2019 9급 선행정학 p.719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 ① 역할연기
- ② 직무순환
- ③ 감수성 훈련
- ④ 프로그램화 학습

[답] ③ 제시문은 조직발전(OD)의 핵심기법인 감수성 훈련의 개념에 해당한다. 감수성 훈련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서로 모르는 비친근자(10여 명 내외)들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실제 직무상황과 동떨어진 비정형적인 환경 하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시켜나가는 훈련 방법이다. 행태과학전문가가 상담자로 참여한다.

2019 9급 선행정학 p.502

19.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 ②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

(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 ③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 ④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답]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별로 예산을 편성 하므로써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게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용이한 제도이다.

- ☒ ② [X] 계획예산(PPBS)에 해당한다.
- ③ [X] 성과주의예산(PBS)에 해당한다.
- ④ [X] 영기준예산(ZBB)에 해당한다.

● 예산제도의 변천

	LIBS	PBS	PPBS	ZBB
지향	통제	관리	계획	감축
취급범위	투입	투입, 산출	투입, 산출 효과, 대안	대안
직원의 지 식	회계이론	관리이론	경제학, 기획이론	관리와 계획
중요정보	지출대상	기관의 활동	기관의 목표	사업, 기관의 목표
결정형태	점증(상향)적 · 미시적	점증(상향)적 · 미시적	포괄(하향)적 · 거시적	상향적 · 참여 적 · 미시적
기획책임	분권	분권	집권	분권
예산기관의 역할	재정적 통제	능률	정책	우선순위
흐름	상향적 (위로 통제)	상향적 (위로 통제)	하향적 (아래로결정)	상향적 (위로 결정)

☞ 2019 9급 선행정학 p.617

20.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총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답] ② 전용(轉用)이 아니라 이용(移用)이다. 전용은 국회승인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용	입법과목(장 · 관 · 항)간 융통 사용	국회의결 요
전용	행정과목(세항 · 목)간 융통 사용	국회의결 불요

☞ 2019 9급 선행정학 p.655